

## “8000만원 빚지고 문닫았다” 광주·전남 소상공인 한숨

신보중앙회, 작년 하반기 광주·전남 폐업 88곳 조사 결과

“폐업 결정에 코로나19 영향 있었나” 광주 97.8% 전남 97.6%

지난해 하반기 폐업한 광주·전남 소상공인들은 폐업 당시 평균 8000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보중앙회조사팀이 발간한 ‘2022년 하반기 보증지원기업의 폐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당시 평균 부채 금액은 광주 7896만원·전남 7605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해 9월 기준 보증 잔액이 남아있는 광주 46개·전남 42개 폐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7일~12월9일 전화·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다. 전국적으로는 총 830개 대상을 조사했다. 광주에서는 5000만~7000만원 부채를 지녔다는 응답률이 30.4%, 전남은 3000만~5000만

원 미만이 28.6%로 각각 가장 많았다. 1억원 이상 빚이 있다는 응답률은 광주 19.6%, 전남 23.8%에 달했다. 지역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이유(1순위)는 매출·이익 부진으로, 응답률이 광주 78.3%·전남 66.7%로 나타났다. 폐업 결정에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있었는지 묻는 항목에서는 광주 97.8%·전남 97.6% 등 대부분이 그렇다고 답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개업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장 문을 닫은 비율은 광주 36.9%, 전남 19.0%에 달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폐업비용 평균은 광주 2064만원·전남 1814만원으로 집계됐다. 폐업비용을 구간별로 나누면 광주에서는 500만원 미만이 28.3%로 최다였고, 전남은 1000만~2000만원 미만이 31.0%로 가장 많았다. 폐업할 때 가장 힘든 사항 1순위로는 광주·전남 소상공 모두 ‘관리금 회수’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같은 맥락으로 ‘사업장 매도’가 힘들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폐업한 뒤 힘들었던 점으로는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광주 76.1%·전남 7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명 중 1명

꼴(광주 21.7%·전남 23.8%)로 ‘과도한 채무로 인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재개 곤란’을 꼽았다. 폐업 소상공인들은 이후 취업을 했거나(광주 34.8%·전남 28.6%) 재창업(광주 21.7%·전남 28.6%)을 하며 경제활동을 이어갔다. 폐업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은 폐업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항(1순위)으로 ‘원상 복구비용 등 폐업비용 지원’을 광주 45.7%·전남 47.6% 등으로 꼽았다. 이어 ‘재기 지원교육 및 재창업 컨설팅 지원’과 ‘회계·세무 등 폐업 컨설팅 지원’ 등도 택했다. 김재환기자

### 함평 군공항유치위 출범... “무안군 들러리냐” 의혹 제기

유치위원회 출범식 겸 2차 주민설명회 무안 이전 확정식 피해보상 대응 차원 함평군, 찬성 높으면 유치의향서 제출



8일 오후 전남 함평군 대동면사무소에서 광주 군공항 함평유치위원회 출범식 겸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함평군 주민들이 광주 군공항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일부 함평 주민은 “유력 후보지인 무안군의 들러리를 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농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된다. 함평군 광주 군공항 유치위원회는 8일 오후 함평군 대동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겸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함평군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유치위원회는 영광원전 피해보상금 배분 사례를 들어 무안으로 군공항이 이전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력한 후보지인 무안에 군공항이 이전할 경우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지자체가 인접 지역인 함평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치위원회는 함평 접경지역에 군공항을 유치해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방안과 광주 민간공항·군공항을 모두 유치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날 광주시와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와 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주민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지인 무안군

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함평을 들러리 세우는 것 아니냐”, “함평의 군공항 이전지역 위치를 먼저 공개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나연호 유치위원회 임시상임위원장은 “광주 군공항 유치가 함평 발전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군공항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캠페인과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군공항 이전 관련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유치 의견이 다수일 경우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찬·반 의견이 비등하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함평에 이어 지난 7일 영광에서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나타나

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정부 인센티브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진 전남도 정책기획관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부류 중이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 간 유치 경쟁이 가능할 정도의 획기적인 정부 인센티브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기획관은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남도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도 차원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거나 하는 오해를 일으켜 인센티브 협상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평=김평춘기자

### 이상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소추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을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의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야 3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일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72시간 시한 안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제안 설명에 나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국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위기를 알렸지만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했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 발언, 2차 가해 등 탄핵 사유가 적절



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희생자, 유족, 국민이 국회에 명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다해 국민 명령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신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도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했다. 야 3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이 장관은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부여받은 임무를 제때 수행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제때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이로 인해 현장 통제, 구급차 진출입로 확보가 지연됐고,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참사 발생 이후 자택에서 관련 조처를 하지 않았고, 관용차를 85분 동안 기다리느라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늦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승호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감